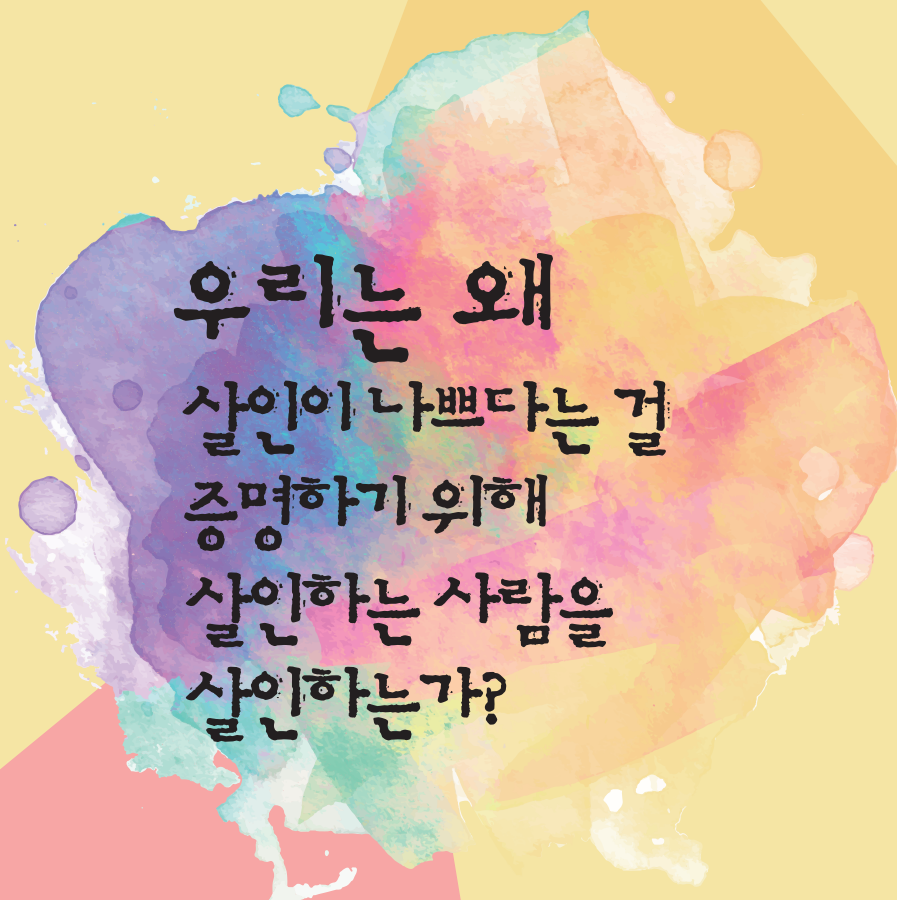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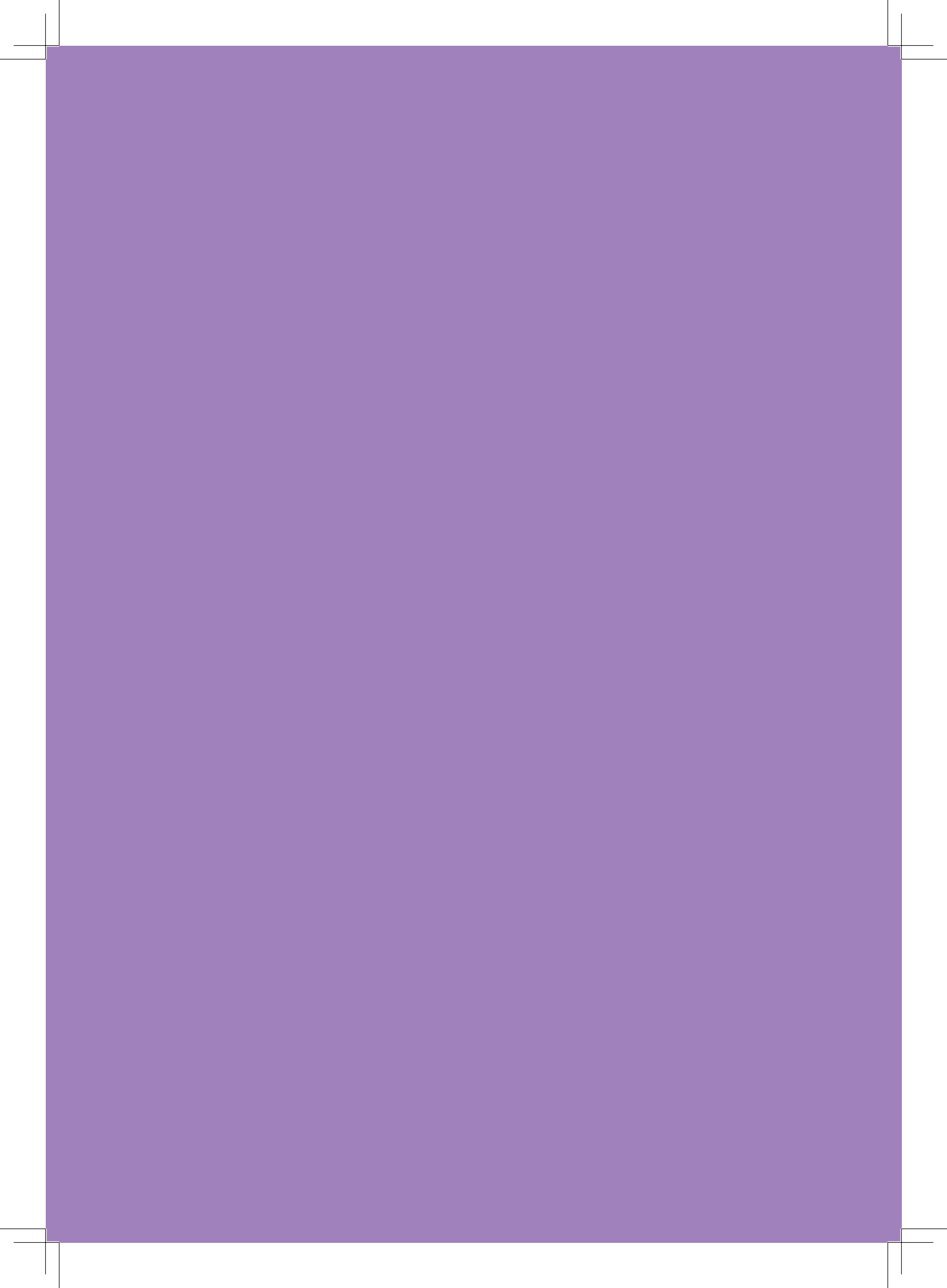


사형제도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우리는 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하는가?



# 차례



- 1. 들어가며      5
- 2. 사형제도폐지 토론 수업 1차시      6
- 3. 사형제도폐지 토론 수업 2차시      24
- 4. 참고자료      32



1. 들어가며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해 보는 것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한 개인을 단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사형수들을 변호해 온 데이비드 도일은 “사형수 80%의 가정환경, 성장배경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범죄는 사회적 그물망이 느슨한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형제도 시스템 내에서 하는 일은 ‘나중에’ 돈을 내는 것이라 말하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에 ‘먼저’ 드는 비용은 무고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며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도입할 때에는 여론 및 다수 의견이 아니라 인권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형제도 역시 인권을 기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사형제도폐지 토론 수업 1차시 : 50분



## 학습목표

1.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질문들을 인권의 눈으로 짚어보고,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2. 사형제도가 범죄 및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범죄자 개인을 넘어 전체 사회구조를 살피는 힘을 키운다.

3. 제시하는 사례를 통해 사형제도를 놓고 상황과 인물에 따라 다각도로 생각해보며, 제도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도입

### 1. 사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시청 7분 이내

### 2. 세월호 생존 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중

일부를 읽어준다.

어른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는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도 사형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종이에 이름을 쓰라고 할 때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려서 종이를 뚫어져라 봤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짓을  
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사인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중략) 화를 내봤자 또다른 불의가  
생기니까. 그걸 방지해야 할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못을 뉘우치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 조태준, 세월호 당시 단원고 2학년



이 학생은 왜 선장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서명지에  
사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퇴선명령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선장은 사형되어야  
마땅할까요? 범죄에 대한 처벌 중 최고형이라 불리는  
사형을 둘러싸고 굉장히 다양한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인  
만큼 사형제도는 찬성, 반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  
인권을 기준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 전개 1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완전한 사형폐지국은 104개국, 전쟁 범죄를 제외하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개국, 한국과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2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24개국 중 과반수인 143개국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가입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2017년이 지나며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형이 유예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OX 퀴즈를 통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시된 명제에 대해 각자 답을 정해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전개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가지입니다.  
전개 1 또는 전개 2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세요.  
만약 사례토론을 선택하셨다면, 마무리로 OX퀴즈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교사용 Tip



이 퀴즈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OX로 선택이 갈라질 때,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X 퀴즈 질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첨부한 활동지를 나누어주세요. 상황에 따라 활동지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가려내는 것이 아닌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가치들의 충돌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지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세요. 함께 첨부한 OX 퀴즈용 PPT 자료를 활용하세요.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 범죄율이  
낮아진다

☞ 사형제도와 범죄 억지력과의 관계 : “1988,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유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 또한 위 연구 <사형제도와 살인범죄율의 연관성>을 수행한 로저 후드 교수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아예 검거되지 않거나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사형이 없다고 해도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사형제는 범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사형수들은  
모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다

☞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등의 죄로 1980년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 선고 당시 국내를 포함해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한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두 차례 편지를 발송해 선처를 당부했다. 유인태 전 국회의원 역시 1974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적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400명 가운데,公安사범이 29%(116명)를 차지한다.

☞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 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여덟 명이 사형 판결 17시간 만에 처형을 당했다. 이들은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사례들은 사형수들은 모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아니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사형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반대했다

☞ 1981년 프랑스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호베르 바뎡데흐가 사형제도폐지 법안을 제출하기 직전 일간지 <르 피가로>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2%가 사형제도를 찬성했다. “유달리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대립하는 법 또는 제도의 도입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 넬슨 만델라는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여론은 사형폐지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폐지된 이듬해인 1996년 국민의 93%가 사형제도의 재도입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는 야만적인 행위이며,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사형제도와 민주주의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질문과 연결시켜 토론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를 만들거나 없애는 데 국민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무조건 다수의 의견으로 반영되어야 할까?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며,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가 사형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세계의 다양한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 역시 사형제도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을 빼앗는 가장 원초적인 인권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인권을 기초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국민 여론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주 근거로 이용한다. 하지만 ‘유영철 사건’과 같은 끔찍한 연쇄 살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직후의 여론조사는 사형제도 찬성에 압도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수치가 확연히 줄어든다. 여론은 시기에 따라 들쭉이는데, 이럴 때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는  
똑같이  
값아주기를  
원한다

☞ 저지른 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 미국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 (Murder Victim's Families for Human Rights)의 버드 웰시는 2010년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외동딸이 살해 당한 후 1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살인자들이 사형을 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됐다. 사형이 해방구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은 정말 가해자가 죽는 것을 원할까?”  
오클라호마주 연방청사 폭탄테러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사건 발생 6개월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사형제를 지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많은 유가족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사형제도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드 웰시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사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들을 떠올려보자. 사형으로 가해자를 죽이는 것 말고, 당장 떠오르는 게 있는지.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내고,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다

☞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 113만7천원(끼니당 약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이 의료비(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9만4천원), 피복비(5만3천원) 순이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사형수는 61명으로 연간 6,000여 만원이 소요된다.

☞ 하지만 “사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거나 미국의 경우 사형 선고까지 가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세금이 덜 든다.”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세월호를 인양할 때 많은 언론들은 수천 억원대 인양비용, 세금낭비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치유하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수천 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아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쓰는 세금은 액수를 넘어서 그 사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용이다.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 2008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가난한 이들, 소수자들, 특정 인종이나 종교 그룹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았다.

☞ 미국의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TED 강연에서 사형제도의 불공정과 허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남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희생자가 백인인 경우 희생자가 흑인인 경우에 비해 사형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11배 더 높으며, 피고가 흑인이고 희생자가 백인인 경우 사형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22배 더 높다.”

☞ 2015년 경향신문과 김석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가 사형수 60명의 현재 및 범행 당시 연령, 직업, 학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장기에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형수들이 많았다. 고아가 10명이나 되었다. 한부모 가정(17명)이나 의붓어머니(4명) 밑에서 자란 사형수도 상당수였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수가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범 이상 전과자는 39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범행동기는 금전 등 경제적 이유가 47%(28명)로 가장 많았다.



## 전개 2

제시하는 사례를 읽어보고,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임병장과 윤일병

임병장과 윤일병은 군대 내 가혹행위로 고통 받았다. 윤일병은 폭력행위를 참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임병장은 이를 ‘참지’ 못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 군인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두 사건은 군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

임병장은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다. 임병장에게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가족 입장에서 임병장은 똑같이 사형 당해야 마땅한가요? 반대로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윤일병의 가해자들을 사형 시키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 👁 임병장 사건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55연대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상(사망 5명, 부상 7명)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포되었다. 원래대로라면 2014년 9월에 만기전역을 할 예정으로 전역이 8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임병장은 조사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부대원들이 선임병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임병장이 평소 이른바 ‘계급열외’를 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반 부대에서는 계급을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는데 열외는 이런 위계로부터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선임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임자들로부터도 선임병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부대 안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특히 계급이 아래인 후임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계급 사회인 군에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

#### 👁 윤일병 사건

2014년 4월 7일, 육군에 복무 중이던 윤일병이 생활관에서 선임 병사 4명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병이던 시절 선임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가해자는 본인이 선임이 된 후 폭력의 중심이 되어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일삼았다. 윤일병의 가족 면회를 막기도 했는데,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폭행은 군대 내 의무실 입실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윤일병 유가족들은 2심 판결 전달, 재판부에 주범인 이00 병장과 유00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었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00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교사용 Tip



세상에는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존재하고, 그럴 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권을 기초로 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이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겠지요. 범죄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사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세요.



## 토론을 위한 징검다리 질문

1.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임병장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임병장, 그리고 윤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사형제도가 이와 같은 일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3. 윤일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에서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00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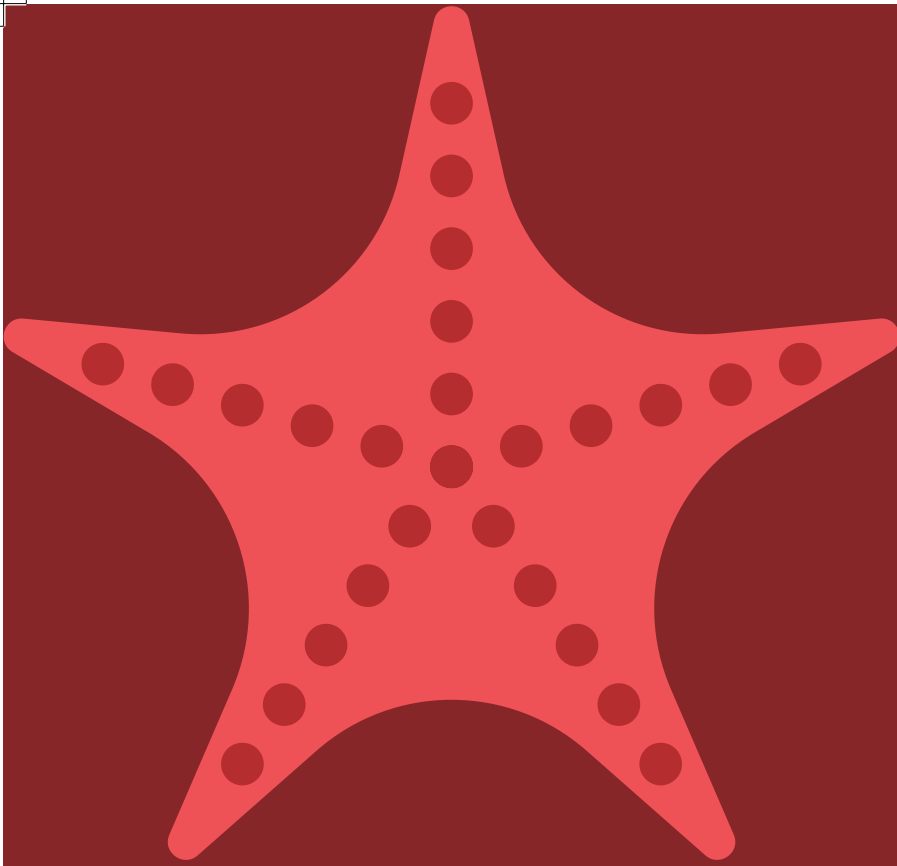
## 마무리

다음 시간에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는 대통령 기자회견 역할극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사형제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기자라면 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 교사용 Tip



첨부한 자료 중 2-2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활동지를 미리 나눠주시고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3. 사형제도폐지 토론 수업 2차시 : 50분



## 학습목표

.....

1. 역할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음을 안다.

## 도입

\* 사형제도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웹툰을 본 후 소감 나누기

제시하는 모든 영상과 웹툰을 감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내용을 파악하신 후 설명으로 적절히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EBS ‘나의 두손’  
인혁당 사건을 다룬 웹툰  
실제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제도 폐지 연설

## 전개

지난 시간 마무리 활동으로 오늘 역할극을 진행하기 위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의 입장이 되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적어봅시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집행관, 인권활동가, 살인피해자 가족 역할을 나눠맡은 후 다른 친구들은 모두 기자가 되어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기자들에게 나누어줄 보도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발언을 마친 후 외쳐볼 수 있도록 모두의 뜻을 담은 구호를 정해봅시다.

예)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마라, 사형폐지 없이 정의 없다 등  
다 적었다면,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준비물 : 현수막(혹은 손팻말), 카메라  
기자회견 진행 : 선생님  
역할 1-6 발언  
기자 질문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선언



각자 맡은 역할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좋을지 적어봅시다. 또, 자신이 맡은 역할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의 발언 중 기억에 남는 문장 혹은 내가 이 역할을 맡았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지 떠올려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아요.



올해 말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대통령

예시)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적, 제도적으로도 사형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과거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뻔한 판사



예시)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과거 확신에 차서 내린 사형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예시)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국가 권력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람을 죽이는 권리까지 갖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는 집행관

예시) 20여 년 전, 교도관으로 일할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



“가해자를 사형시켜서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이 돌아온다면 제 손으로 사형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사형시킨다고 저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살인 피해자 가족

예시) 저는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로 딸 줄리메리를 잃었습니다. 이 테러로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제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운동을 이끌어온 인권활동가



예시) 흔히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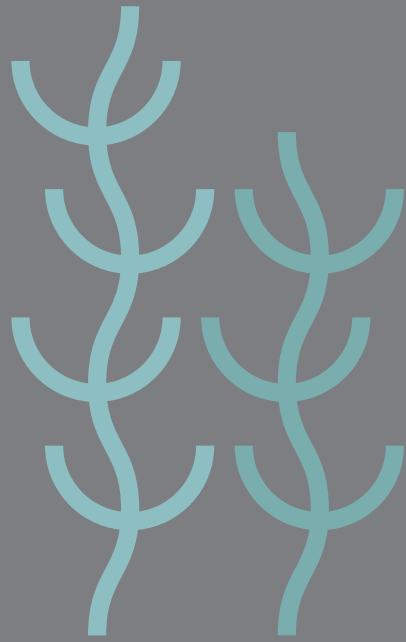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의회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지, 세계적인 동향은  
어떤지 묻는 기자들

예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생각입니까?



## 마무리

친구들의 발언 중 인상깊었던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업을 하기 전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4. 참고자료

---

## 1. 수업 진행 관련 자료

### ① 1차시 도입

사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전 세계 사형폐지 현황을 담은 도표와 함께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서 사형제도를 접한 사람들(집행관, 종교인, 교수, 변호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의 모순을 짚어본다.

### ② 1차시 전개 1, 2

사형제도 OX 퀴즈 PPT(뒷부분 징검다리 질문 포함)와 활동지

### ③ 2차시 도입

- 사형 집행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EBS '나의 두손': 미국의 사형 집행과정에서 집행관들의 고뇌를 담은 짧은 영상이다.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주장이 무색하게 이 제도의 끝,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낱낱이 보여준다.

- 만화로 보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이야기 '1분' :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분 중 이수병님 아내의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된 웹툰이다.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가족들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변호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사형선고 후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이 사건은 세계 최악의 사법 살인이었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오판 가능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 ④ 2차시 전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활동지

## 2. 참고자료

### ① 사형제도 세계적 현황

국제 앰네스티가 매년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과 추이를 발표한 다. 가장 광범위한 자료이며, 전 세계 사형제도를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② 제20대 국회 발의 준비 중인 사형제도폐지 법안

### 3. 참고문헌과 출처

고종석, 고종석의 낭만미래, 곰, 2013

[내 이름은 1085] 생존 사형수 60명... 최고령 77세·최연소 25세·최장기 24년째 구금, <경향신문>, 2015.04.24 22:33:4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42202025&code=940301#csidxb291216ba73950f90a7e5f08801a4c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42202025&code=940301#csidxb291216ba73950f90a7e5f08801a4ce)

사형수 1명의 사회적 비용은?, <한겨레>, 2009-02-05 16:5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706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7062.html)

"사형이 해방구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살해 피해자 가족 한국 방문... "증오심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 <프레시안>, 2010.06.21 07:02:0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1216>

임 병장의 총기난사 이유는 계급열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년 06월 24일 17시 42분, [http://www.huffingtonpost.kr/2014/06/24/\\_n\\_5524512.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4/06/24/_n_5524512.html)

국제앰네스티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의 근거 모아보기 ①, ②  
<https://amnesty.or.kr/14948/>, <https://amnesty.or.kr/11104/>

나무위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https://namu.moe/w/%EC%A0%9C28%EB%B3%B4%EB%B3%91%EC%82%AC%EB%8B%A8%20%EC%9D%98%EB%AC%B4%EB%B3%91%20%EC%82%B4%EC%9D%B8%EC%82%AC%EA%B1%B4>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집행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 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되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세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라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세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집행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집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이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 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과 파키스탄(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 사형제도 세계적 현황

### -국제 앰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2016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집행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집행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 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제 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집행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되었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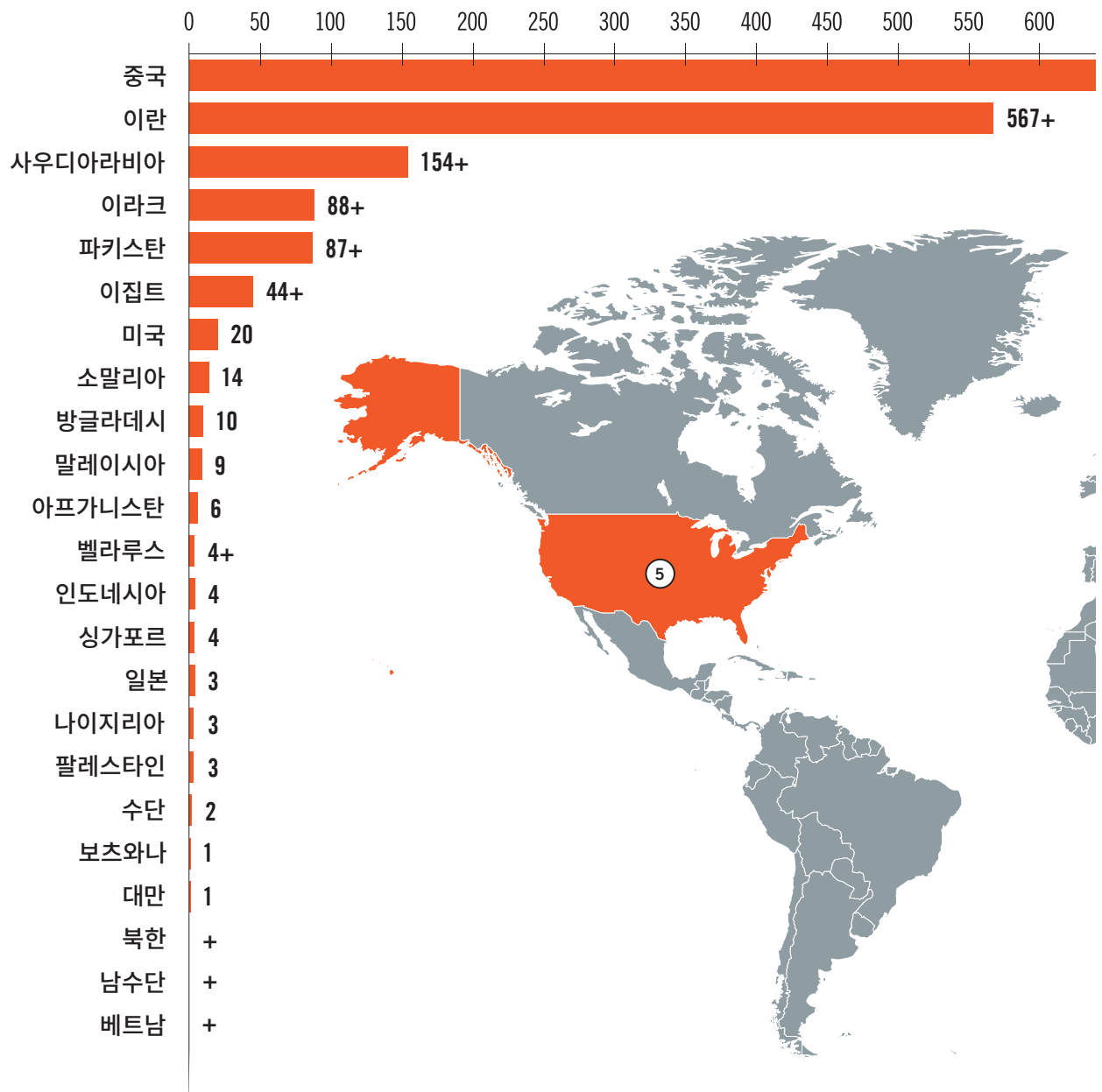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2016년 사형집행국



2012년-2016년,  
매년 사형을 집행한  
11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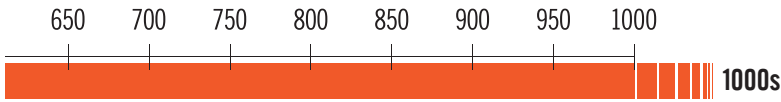
① 중국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수치가  
국가기밀이다.

② 이란  
매년 수백 명이  
처형된다. 대부분의  
사형 집행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이다.  
수백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③ 사우디아라비아  
수백 명이 처형되었다.

④ 이라크  
사형집행이 대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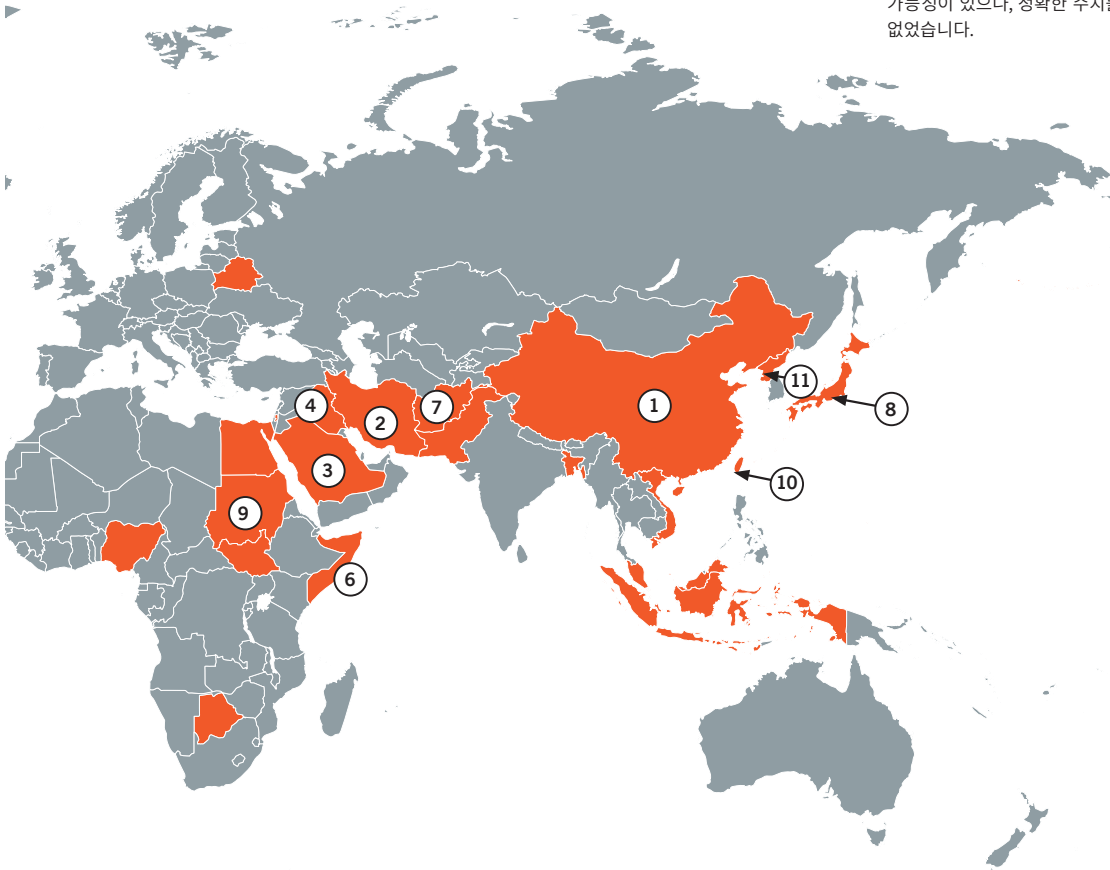
⑤ 미국  
사형집행과  
사형선고가 각각  
1991년, 1973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 일반적인 국경 및 관할권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입니다.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입장으로 이 지도를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 “+”는 국제엠네스티가 파악한 최소치입니다. “+” 앞에 숫자가 없는 경우, 1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확실하지만, 수치로 파악하기 불가능했음을 나타냅니다.

• 리비아, 시리아, 예멘에서 사형이 집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⑥

**소말리아**  
알려진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상당히 증가했다.

⑦

**아프가니스탄**  
하루에 여섯 명을 처형했다.

⑧

**일본**  
사형집행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⑨

**수단**  
배고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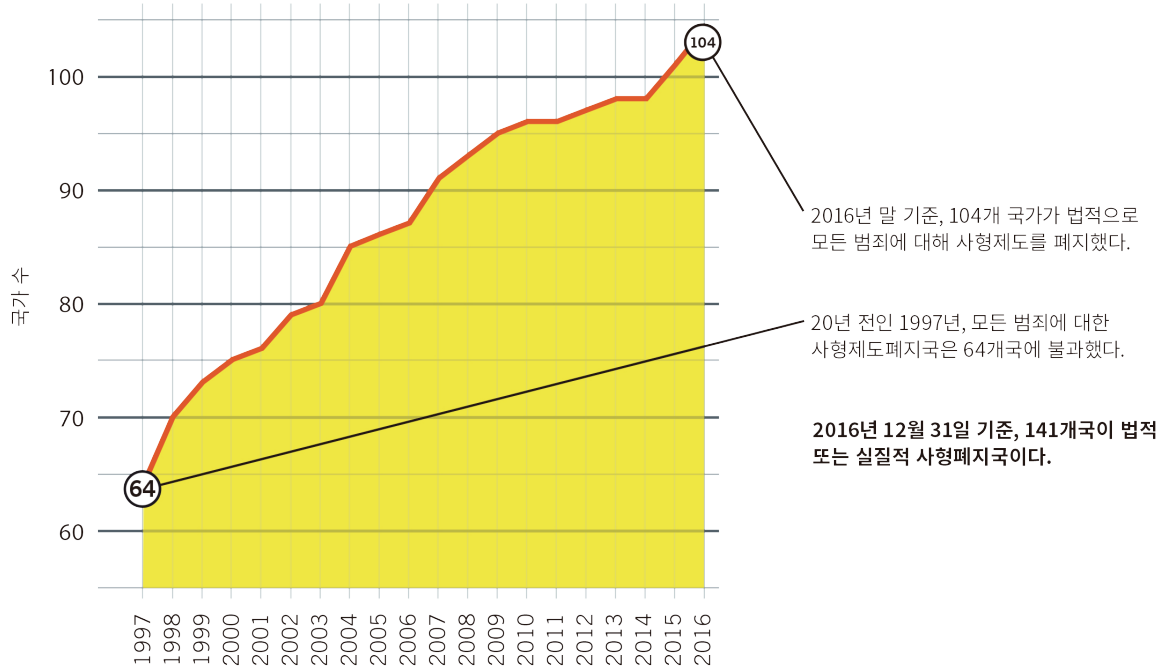
**대만**  
사형선고가 확정된 지 3주도 되지 않은 남성에게 형이 집행되었다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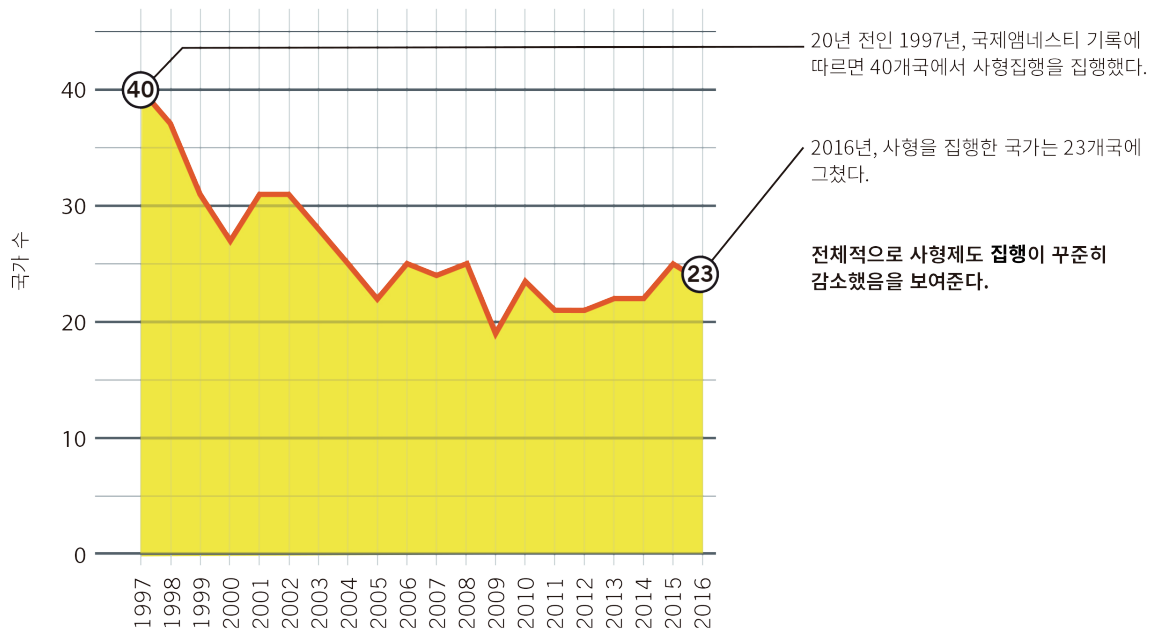
**북한**  
불공정한 재판 또는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나 행동에 광범위하게 사형을 집행했다.

# 1997년 - 2016년 사형제도 동향

## 사형폐지국 증가



## 사형집행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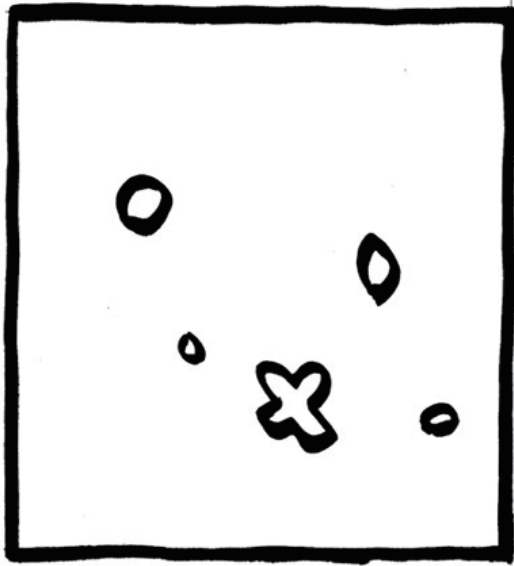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인혁당사건 희생자 이야기  
\_박건웅 화백

## 만화로 보는 인혁당사건 희생자이야기



이 만화는 인혁당사형수중 이수병님의 아내의  
사연을 증언한 김형태변호사님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참고로 만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만화로 보는  
인혁당사건 희생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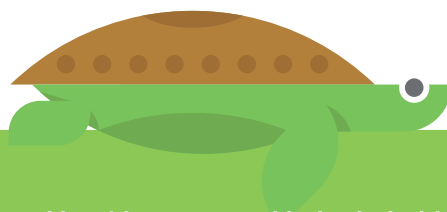






네 많이 컸어요  
아버지....

\*만화 원작에 맞춤법 오류가 있으나, 수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정의와 평화」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권장하기 위한 교회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을 토대로 하여 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하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자각시키며, 한국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정의와 평화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1970년 발족 후 1975년 주교회의의 직속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교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인권교육센터 '들'  
천주교인권위원회